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2021년 10월 26일 (화)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 진행순서
 - 조사결과 발표
 - 시민조사팀 발언
- 자료순서
 - 입장 :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에 부쳐
 - 첨부자료. 1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 내역을 통한 조사 결과
 - 첨부자료. 2 대전광역시 서구 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 대조 결과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1년 10월 26일(수)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간사 설재균, 010-3583-8786, 042-331-009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제 목 /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 발표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 토지 대상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결과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이하 시민조사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와 시민이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3. 시민조사팀은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농지소유 현황과 서구 도안개발지구를 주요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개발지구는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현직 공직자 명단대조를 진행했고 동명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거래 시기, 토지의 지목, 토지의 규모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심 및 투기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4.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대전광역시 공보(시보)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변동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내역에 1,000m² 이상의 토지를 중심으로 확인 했고,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5. 시민조사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앞에서 시민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

- 조사결과 발표
- 시민조사단 발언

- 일 시 : 2021년 10월 26일(화) 10:00 ~ 10:3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설재균(010-3583-8786, 042-331-0092)

2021. 10. 26.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에 부쳐

- 대전광역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의심 의혹 **17명** -
-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 투기의심 토지 소유자 **39명** 공직자와 동명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의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발표 후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조사팀(이하 시민조사팀)을 추가로 구성해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민조사팀의 조사 결과 **1)17명(시의원 8명, 구의원 9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2)대전광역시 서구 투기 의심 토지 소유자 중 공무원과 동명인 39명**을 확인했다.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 **6조**에서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7조**에서 주말, 체험, 영농 농지세대원 기준 **1천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농지 소유를 통한 투기 행위가 전 시민에게 알려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는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17명**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전 뿐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임기중에 농지를 구입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것이라 작성하고, 취득 후 위탁이나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다.

시민조사팀은 대전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1,000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9000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여 농지 소유주 중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시-구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시민조사팀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실효성있는 재조사를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된 의원과 해당의원 소속의회 그리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1월**

30일까지 대전시의 조사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소명이 없다면 경찰 고발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1) 농지법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된 의원과 해당의원 소속 의회에 요구합니다.

1. 각 의회는 토지를 소유한 의원 및 배우자의 농지 취득, 임대 등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를 요구합니다.
2. 농지법 위반 사유가 있는 토지는 적법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 첨부자료1, 표2, 표3의 의원별 농지법 의심 토지 목록 참고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1. 시민조사팀이 조사한 투기의심 토지 소유자 중 현직공무원과 일치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시민조사팀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와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 하는 방식 등의 실효성 있는 전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

첨부자료. 1

-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 내역을 통한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방 향)
 - 재산공개 대상자 및 배우자의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사례 검토
- (대 상)
 - 재산공개 대상자(정부윤리위원회, 대전시윤리위원회 자료기준)
- (범 위)
 - 재산공개 대상자 및 배우자가 소유한 전,답
- (방 법)
 -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농지법 위반 및 투기의심사례 조사
 - 대한민국 관보 및 대전광역시 공보 재산공개 대상자 정보 확보
 - 공개된 재산 중 토지(전,답) 확인
 -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경 등의 확인
 - 정부윤리위원회 재산정보공개 대상자 및 대전시윤리위원회 대상자 본인, 배우자 토지 면적을 합산해 **1,000m²** 이상 토지 소유자 정리

2. 조사 결과

1) 정부윤리위원회 및 대전시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자(명)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8명
5개 구의회 의원	9명

① 정부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 해당 의원 농지법 위반 여부 소명 필요

(표 1)

이름	신분	지역	소유권 이전 연도	소유 면적 (㎡)	소유 자	기타 비고
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261번지	2012	1620	본인	경작 중 (자경 여부 확인 필요)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54-1	2005	2332	본인	2020년 토지 구매 (의정활동 중 토지 매입 사유 요구) 총 토지 면적 : 2,734제곱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217-10번지	2020	402	본인	
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75-3	2012	2828.5	배우자	농사 흔적 없음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493-7번지	2010	1559	배우자	경작 중 (자경 여부 확인 필요) 총 토지 면적 : 3,375제곱미터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496-1번지	2010	1816	배우자	
문성원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090번지	2010	281	본인	2021년 무주, 영동군 토지 동일인에게 매각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864-1번지	2010	809	본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257-6번지	2010	592	본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2010	96	본인	

		690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7-7	2010	248	본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2-9	2017	168	본인	경작 중(자경 여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9번지	2020	1617	본인	2020년 경매 매입 (1.84억 매입) 2021년 3억5천 매각 (면적당 71만원 거래)
박혜련	대전광역시 시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1번지	2004	2235	본인	경작 중(자경 여부 확인 필요) 총 토지 면적 : 4,346제곱미터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44-7	2004	2111	본인	
우애자	대전광역시 시의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향동리 159	2005	3418	본인	상속 토지로 농지법 제7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총 토지 면적 : 17,133제곱미터 비무장지대 내 토지 소유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향동리 256	2005	658	본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향동리 213	2005	7312	본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향동리 257	2005	1970	본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향동리 212	2005	3775	본인	
윤용대	대전광역시 시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456-1	2013	1339	본인	농사 흔적 없음

② 대전시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 해당 의원 농지법 위반 여부 소명 필요

(표 2)

이름	신분	지역	소유권 이전 연도	소유 면적 (㎡)	소유자	기타 비고
성용 순	동구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29번지	2008	99	본인	재산 신고 누락 의심 (대전시 동구 상소동 446) • 446-1로 분번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45-2번지	2005	14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47번지	2017	2886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대장에서 446-1 면적은 4,033제곱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부등본에서 446-1번지는 3373제곱미터 446번지 670 제곱미터 누락 일부 경작, 일부 소나무 심음 총 토지 면적 : 10,409제곱미터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48-2번지	2004	29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50번지	2008	397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51-1번지	2008	314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583-2	2005	314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46-1	2017	3,125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583-3	2005	572	본인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86-7	2007	300	배우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달전리 210-5	1996	1026	배우자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446-1	2017	909	배우자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344-3	2020	425	배우자	
황종 성	동구 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43-2	2009	1327	배우자	경작 중(자경 여부 확인 필요) 총 토지 면적 : 1,479제곱미터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43-8	2009	51	배우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43-7	2009	101	배우자	
박양 주	서구 의원	충청북도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296	2001	1041	본인	농사 흔적 없음
윤준 상	서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236-1	2020	1233	본인	2020년 토지 매입 (의정 활동 중 토지 매입 사유 요구)
전명 자	서구 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16-1	2000	1534	배우자	경작 중(자경 여부 확인 필요)
정능 호	서구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600	2016	463	본인	대전, 계룡, 논산에 농지 소유 벼농사 확인 했으나 벼가 검게 변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음 총 토지 면적 : 17,110제곱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87-18	1990	1336	본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33-1	1990	1448	본인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443-1	2006	815	본인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443-2	2006	1795	본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12	2008	464	본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13-1	2008	775	본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13-21	2008	62	본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13-22	2008	212	본인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37-125	2004	1322	본인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37-126	2004	104	본인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237-16	2004	661	본인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447-1	2006	4347	본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56-2	2004	1388	본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1	2004	1918	본인	
정현 서	서구 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470	2012	601	본인	농사 흔적 없음 총 토지 면적 : 1,009 제곱미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471	2012	408	본인	
조규 식	서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332	2014년 매입	1071	본인	농사 흔적 없음 해당 토지 주변으로 전원주택 단지 조성 총 토지 면적 : 2,554 제곱미터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34-11	2015년 매입	420	배우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34-9	2015년 매입	572	배우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34-7	2020년 매입	491	배우자	
김태 성	대덕구 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18	2003년 매입	2268	본인	토지의 일부만 농사 중

* 참고자료

● 농지법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1항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1항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
- 2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제8조(농지취득자격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농지법 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경을 해야한다는 근거가 됨
- 농지법 7조 1항에 따라 상속 기준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공개대상자를 확인 하였음
- 농지법 7조 2항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농지 세대원 기준 1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였음
- 농지법 8조에 근거하여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자경여부 확인을 통해 농지취득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자료. 2

- 대전광역시 서구 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 대조 결과 -

1. 조사 개요

• **(방 향)**

○ 대전광역시 서구(도안지구)를 중심으로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 **(시민조사팀 구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시민제보 센터 운영, 현장조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 등

• **(기 간)** 2021.06.29 ~ 2021.9.30

• **(대 상)**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공무원(5개 자치구 포함),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대전광역시의원(8대), 5개 자치구 의원(8대) 등 8,500여명 및 LH직원

- (범 위)

- 대전광역시 서구 전-답 / 11,000개 필지
- 서구의 개발지구 확정 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토지 거래자

- (방 법)

-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된 지적도를 통해 서구 전-답 11,000필지 및 도안지구 폐쇄 지적도 확보
- 토지대장 발급을 통한 실 소유주 및 거래시기 확인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명단과 대조를 통한 동명 확인

2. 조사결과

- 53필지에서 공직자 명단과 동일한 이름의 소유주 39명 확인

(시민조사팀은 현직 공무원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동일인 여부 확인 요청)

(표 3)

	서구						유성구
지역	관저동	가수원동	매노동	용촌동	평촌동	도안동	원신흥동
동명/ 필지수	9/14	11/15	1/2	8/9	7/8	3/4	1/1
동명(총)/ 필지 수(총)	39명/53필지 (용촌동, 평촌동 동일인 중복)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시민조사팀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활동가 김채린입니다.

지난 3월, LH 직원 투기사건이 밝혀졌고 대전시에서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투기조사를 위해 구 단위의 조사가 아니라, 시·구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대전시가 의미있는 조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시·구 합동 조사단은 개발지구 중심으로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도 의심 사례 19건 중 1건만을 고발한 것이나, 개발지구선정 기준이 애매한 점 등 많은 의문만 남았습니다.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조사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요구에도 대전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민조사팀은 안산지구에 이어 선출직 공직자 소유 농지와 서구 개발지구 중심의 농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17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농업인인가 싶을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남, 충북, 전북 등 멀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왜 소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땅도 있었고, 심지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땅도 있었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입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농지법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넓은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위탁경영을 하며 농지를 관리하는 것도 농업인도 아닌 공직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설명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는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는 이전의 보여주기 식 조사가 아닌 시민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다시 실행해주십시오! 대전시는 ‘원도심 부활과 균형발전, 사람 중심 포용도시 건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직윤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저는 정말 그런 대전에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